

# '카드깡' 수령액의 1.7배 부담해야

### "400만원 받고 수수료 포함 674만원 내야" ... 이용고객, 거래한도 축소·거래제한 제재 부과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현혹돼 카드를 빌려주면 이른바 '카드깡'에 연루돼 2배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06명의 카드깡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돈은 수령액의 1.7배에 달했다.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20% 내외의 카드할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과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674만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한 카드깡 이용자는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떨까"는 권유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병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852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 5년 총액 1419만985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는 1~6등급이었고 23.5%는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깡은 유행가맹점 등을 이용해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고



'노이즈 컨트롤' 구현 소니코리아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신개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HRA 무선 스테레오 헤드폰 MDR-1000X 출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제품 MDR-1000X는 소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센스 엔진을 탑재해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ling)'과 원하는 소리를 차음하거나 증폭할 수 있는 '노이즈 컨트롤(Noise Control)' 기술을 구현한다.

리대금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손쉽게 유행가맹점을 만들어 카드깡에 이용한 후 사라지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깡 업자는 형사 처분을 받으며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 (<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 (<http://sl332.fss.or.kr>)를 활용하면 본

인에 맞는 대출업체를 찾을 수 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정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제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카드사 연체이자율 20%대 고금리

### 민병두 의원 자료 "5년간 3774억원 쟁거"

카드사들이 연체이자 수익으로 거둔 금액이 최근 5년간 3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카드사들의 연체이자 수익은 총 3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이자율은 21.9~27.9%로 고금리다.

회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가 8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

드 852억원, 삼성카드 615억원, 현대카드 426억원, 롯데카드 356억원, 우리카드 321억원, 하나카드 312억원 등의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은 자금조달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율"이라며 "순습계 막대한 이자수입을 거두는 것 보다 이자율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가계대출, '고신용자' 다중 채무 급증

가계 빚이 급격히 불고 있는 가운데 3개 이상의 대출이 있는 고신용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 채무자 수는 1101만명으로 2012년 말보다 56만명 증가했다.

가계대출 금액은 75조3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64조2000억원 불었다.

이중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332만명에서 368만명으로 36만명(11%) 증가했다. 다중채무금액은 30% 가까이 증가해 2012년 308조원에서 올해 6월 400

조원으로 92조원 늘었다.

특히 고신용등급인 1~3등급 다중채무자와 채무금액이 몸집을 키웠다. 2012년 49만명에 불과하던 다중채무자 수는 53% 가까이 증가해 지난 6월 75만명에 달했다. 2012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채무금액은 158조원을 넘기며 7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다중채무자는 11만명, 채무금액은 15조원 감소했다.

이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의 경우에도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뉴스시스

## '등급 장사' 신용평가사 설립인가 취소

앞으로 신용평가회사가 이른바 '등급장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등급장사는 신용평가사 후한 신용등급을 약속하고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때내는 관행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평가사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인가 취소까지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신평가사 간 등급대합 행위 △계약을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사면제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용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신용사 임직원은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경우 해

당 기업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또 임직원의 배우자가 평가대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했다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신평가사의 배상 책임도 무거워진다. 신용평가사 기업의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허위 평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면, 신용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가 자본시장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이 올 4분기 완료되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모기업이나 정부 등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뉴스시스

## 한은 "직불카드' 사회적 비용 가장 낮아"

###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보고서... 거래건당 신용카드-현금-직불카드 순

한국은행은 21일 신용카드와 현금보다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의 이용률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은 21일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이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 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주요국들의 연간 사회적 비용 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2~0.83%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가 가장 높았다.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0.98~2.85유로), 현금(0.26~0.99유로), 직불카드(0.32~0.74유로) 순으로 조사됐다.

김규수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장은 "신용카드의 건당 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드발급비용 및 신

용카드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이용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호주와 덴마크는 신용카드 사용자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에서 현금 이용을 금지했다.

그 결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노르웨이의 현금 이용비중은 2007년 25.9%에서 2013년 18.4%로 줄었고, 호주는 2006년 72.7%에서 51.3%로 감소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노르웨이(2013년) 각각 51.4, 7.4%, 덴마크(2009년 기준) 각각 48.4%, 1.1% 등으로 직불카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지난해 14.1%에 불과했으나,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39.1%에 달했다. 현금 이용비중은 38%에 달했다. /뉴스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